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1959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8. 11(금) 총3매(본문3매)
담당 부서	사무국	담 당 자 • 국장 김성현 • ☎ (02) 568-1863
보 도 일 시		즉시가능

국토·도시계획학회 “성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추진하나?” 세미나 개최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위한 세미나가 8월11일 오후 3시 한국기술회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홍배) 국토·도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은 수석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 검토 및 향후 과제’, 이재준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는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방향’, 이 훈 소장(살둔제로 에너지하우스)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천수단으로 도시지내 에너지 자립형 거주공간형성 제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6명의 지명토론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하는 청중토론을 통해 올바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을 토론하였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과정과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방자치체와 현장 중심체제로 재구성할 것,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폐지 혹은 수정할 것, 도시재생 출과사업관리자 신설, 도시재생지원센터 핵심주체의 역할 세분화 및 전문성 향상, 도시재생사업 도시개정 재원의 다변화와 다양한 자원 활용,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토지 및 비축토지 활용 확대, 플랫폼형 도시재생 토지주택시장 진단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절차 간소화, 성과와 숫자에 얽매인 사고를 버리고, 중앙부처간 칸막이 해결, 중앙부처별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재정 투입,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비율 부담 완화, 사업 공모방식을 상향식 지자체(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전환, 물리적인 하드웨어 개발보다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훈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 소장은 제로에너지 주택 시공사례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하우스의 특징점 홍보, 거주자들의 주택이용에 대한 교육, 인증제도 및 방법의 일원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형시공사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희연 교수(충북대)를 좌장으로, 김은희 센터장((사)걷고싶은 도시연대), 이왕건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전경구 교수(대구대), 최창규 교수(한양대), 홍성덕 본부장(LH 도시재생본부), 김이탁 단장(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이 지명토론과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청중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토론하였다.

- 1) 김은희 (사)걷고싶은 도시연대 소장은, 인구절벽 상황에서 도시 재생에 ‘보편적 삶의 지표’와 ‘미래지표’를 만들어 축소도시에 적극적인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다양한 사업을 담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 중앙, 지방, 현장 등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하였다.
- 2)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실행가능한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 대상지 선정방식과 정책방향의 구체화, 국민홍보 강화, 사회적경제조직·중간지원조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간 협력방안, 뉴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거품 제거, 법적 기반 및 기존 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언하였다.
- 3) 전경구 대구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의 개념정립, 객관적인 사업 선정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재생사업을 포

괄보조사업 형태로 추진,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의 육성과 인력확보,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비율을 낮추고 수도권과 지방의 매칭비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4)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앙, 지방, 연구기관의 과도한 역할과 의존을 지양할 것,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 도시재생R&D는 시스템적으로 유연하게 초기에는 작게 하여 경험을 통한 반성과 대응을 실천할 것, 중앙부처간 칸막이 해결보다는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제언하였다.
- 5) 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본부장은 공식 비공식 기구의 역할 및 협업,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 대자본과 중소기업, 지역중소업체·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참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한 모니터링, LH의 빠른 물리적 재생에 특징점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제언하였다.
- 6)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형성을 고민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 매년 평균 8천억원 규모로 투입되는 정부세금을 알토란처럼 사용할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선정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8월2일 대책 검토와 함께 설명할 것이며, 구체적인 국비지원 공모계획은 추후 지방설명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한국토·국토학회에서 법제도개선과 도시재생 R&D 버전 2에도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방청객 중에는 지자체의 종합플랜과 관리계획의 상충관계 정리, 노후주거지 재생은 공공이 주도하는 생활인프라 개선 위주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 시 약2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전략계획 수립 시 철저한 도시구조분석 기반의 기초조사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좌장을 맡은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1)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목표 달성의 명확화
- 2)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혼란과 다양한 문제를 정리
- 3) 도시재생 전문가·활동가 양성으로 중간역할 체제를 강화
- 4) 대상지 선정 지표에 미래지표, 축소도시, 정책방향 반영
- 5) 분권화와 지자체의 재량권, 포괄보조금을 통한 자율성 인정
- 6) 숫자와 효율성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성공사례를
- 7) 공식 비공식 기구가 함께 추진할 것(다양한 주체 참여)
- 8)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조정과 함께 융통성을 줄 것
- 9) 도시재생 특구지역 선정 필요(모델사업)
- 10) 사업추진주체는 영국, 일본의 도시재생(주) 형태를 고려할 것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회장은 본 세미나 후속으로 다시 한 번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도시정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도시계획학회
김성현 국장(☎02-568-1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